

공공도서관이 사라지고 있다

통폐합·인원감축·예산삭감 등 구조조정 전문가 퇴출 등 부작용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구조조정이 개선 아닌 개악으로 흐르고 있다. 구조조정은 통폐합과 인원감축, 예산삭감, 민영화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퇴출과 도서관 고유 기능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구조조정이 개선 아닌 개악으로 흐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기능 및 조직 통폐합·인원감축·예산삭감·민영화 등.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퇴출로 도서관 고유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민간 위탁경영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미봉책은 정부정책과도 배치된다. 최근 정부는 '2천년대를 준비하는 새 문화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구조조정 방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불협화음의 1차 피해자는 구조조정 대상인 사서들이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 지원예산 무차별 삭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370개 가운데 시·도 교육청은 221곳을, 지방자치단체는 133곳을 관리한다. 사립도서관이 16곳. 97년에 이들이 사용한 예산은 1,647억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985억원으로 60%를 차지한다. 자료 구입비가 고작 173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의 과다지출이 눈에 띈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은 당연한 듯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설립·관리기준을 놓고 보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법정 근무인원은 5,095명. 현재 근무인원은 5,021명이다. 이 중에 행정직 667(667), 사서직 1,724(1,786), 정규직이 아닌 기타 직원(일용직·고용직)이 2,630(2,632)명이다. 법정기준에 초과한 인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은 구차한 이유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인원감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 경우 무등도서관 등 3곳을 통폐합하면서 직원 96명을 52명으로 줄였다. 무등도서관을 본관으로, 2곳을 부속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속기관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낮췄다. 한국도서관협

회 이용훈 부장은 "구제금융시대로 돌입한 이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며 전문 사서를 퇴출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궁색해지면서 공공도서관의 지원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있다. 울들어 자료구입비가 '0'인 곳이 10여곳에 이를 정도다. 한 출판사 대표는 "최

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책을 기증해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예산삭감에 따른 근색한 요청의 이면에는 생존의 문제가 있다"고 추정했다. 자료구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공공도서관 운영기준에 미달한 도서관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립·관리기준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부채를 드러내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는 근거는 교육부가 지난 9월 3일 '관보'를 통해 제기한 '평생학습제정(안)입법예고'에서 비롯됐다. 명칭이 '평생교육법(안)'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법안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사회교육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얼마든지 공공도서관의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익성 없는 곳은 통폐합 수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마자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돌입했다. 춘천시가 중앙도서관을 '강원평생교육



지난 9월 경주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논하고 있다.

정보관'으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도 공공도서관 6곳 중에 시교육청 소속 3곳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10월 31일, 인천시의회는 상정된 조례 개정을 유보한 상태).

인천시 공공도서관에 재직중인 한 사서는 "6급에서 9급까지 교육행정직과 함께 정원의 범위를 적용하고, 5급과 4급은 직렬 구분을 적용하여 5급은 4명이 퇴출될 형편이다. 관장직을 사무관이 맡아 한 직급 낮춰질 것이며, 행정직 중심으로 이루어질 구조조정에서 사서자격을 가진 많은 사서들이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공공도서관을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은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 91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91년 4월 '부칙'을 정할 때, "공공도서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96년 12월 31일)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96년 말까지 비사서직 관장의 직무를 사서직으로 보직 대체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97년 말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3개월 코스의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포

공공도서관 고유기능 훼손 있을 수 없어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양일모(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 공공도서관의 성격이 첨단학술정보센터로 바뀌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명칭도 학술정보센터로 변경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도서관을 교육의 장에서 떠난 일반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이 대사회적 학습의 장이 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평생교육법(안)은 현재 조정중에 있다. 법의 개정된다고 하여 공공도서관 고유 기능이 훼손될 수는 없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고유 기능에 사회학습차원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 및 활용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일이다.

박광무(문화부 도서관박물관 과장) — 평생교육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 훼손이 우려된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뒤 문화부에서 항의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김포옥(전북대 문헌정보학 교수) —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행정공무원이 실적

올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통폐합은 내일을 위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도 지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방책으로 평생교육법(안)을 마련하려 한다.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세 일부를 평생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활용할 곳은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그래야 평생교육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사서들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 자격증만 믿고 준비하지 않는 사서들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문가 의식 없는 공무원의 퇴출은 당연하지 않은가. 다만 행정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서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종진(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공공도서관을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 사고에서 기인했다. 갈수록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서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있다. 파주시·의정부시·안양시·성남시·안산시·의왕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위탁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공영주차장·시민회관·환경관리사업소·재활용센터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일본 2,172개, 미국 15,346개, 영국 5,185개 등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하다. 1개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한국이 12만4천명인 반면, 일본 6만명, 미국 1만6천명, 영국 1만4천명 등이다. 1인당 장서 수도 0.2권으로 일본 1.5, 미국 2.7 등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대 장서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구조조정 시대를 맞이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어렵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명칭개정'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김포옥 교수는 "그렇다면 교육세 등의 일부를 공공도서관에 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식·정보 전달 기능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없다고 도서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출판계가 공공도서관의 위기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출판평론가 이중환씨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출판물의 1차 소비자인 반면, 우리는 개인이 1차 소비자다. 공공도서관이 책을 많이 구입할 때 개인은 책을 살 필요가 없으며, 출판계 또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도서관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판계가 일조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있는 공공도서관마저 없애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새시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오완진 기자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면 도서관 고유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육 교수(전북대 문헌정보학)가 지난 9월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공도서관의 전문의식과 교육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장의 34%가 사서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장을 전문직으로 평가한 사람이 61%에 지나지 않았다. 도서관직을 특별히 지망하지 않았다는 관장도 44%나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추진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비사서직 관장을 보호할 취지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김교수는 "행정 개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되는 인원은 당연히 행정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통폐합이 진행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행정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춘천 중앙도서관이 '강원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관장·서무과·사서과·연립실 등에서 관장·행정지원부·정보지원부·문예교육부·사료관사무실 등으로 변경됐다. 인천도 서무과·사서과·열람과 등에서 운영과·자료봉사과·지원협력과 등으로 변경할 움직임이다. 통폐합의 잡음이 행정직과 사서직의 '뺄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도 여기에 있다.

공공도서관의 통폐합이 도서관 고유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뜰

나 부족한 사서들이 대거 퇴출 또는 행정직으로 흡수되면 자료대출과 열람기능의 축소로 이어져 정보전달 체계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안) 추진으로 도서관 고유기능의 훼손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만 대사회 학습기능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시대에 공공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더욱 요구되며

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몫을 부여할" 의도라는 것. 반면, 문화부는 "현재 공공도서관 설치·육성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매년 20개관 이상을 건립하기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에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2천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에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도서관 자료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통폐합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서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이를 알고서도 무시하지 않고서는 공공도서관 통폐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사서 퇴출 등 도서관 고유 기능 훼손

사서 퇴출의 문제는 도서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일본·미국·영국 등은 자료실 중심으로 운영한다.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사서보다 행정직이 중시되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공부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또다른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